

국내 로컬푸드 담론에서 연대형성의 문제*

-올리히 벡의 위험사회론과 불안의 연대 개념을 중심으로-

이태훈** · 박성훈***

로컬푸드는 단순한 식품체계를 넘어 지역 주민의 연대와 신뢰 형성을 지향하는 사회 운동으로까지 점차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 하지만 신뢰와 상호성 같은 공동체적 가치는 이를 내면화하지 못한 참여자들이 단기간에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추구할 수 있을 만큼 쉽게 형성되지 않는다. 본고는 로컬푸드 운동에서 이러한 연대형성의 문제에 대해 불안의 연대와 위험사회에 대한 올리히 벡의 논의를 빌어 그 가능성을 모색해보았다. 올리히 벡은 현대사회의 위험이 더 이상 개인의 심리적 문제나 집단적 인식의 편향성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았다. 특히 그는 근대/근대성이라는 보편적인 사회적 지평을 드러냄으로써 이를 보여주고 있다. 근대적 위험은 과거와 단절된 채 미래로 지연되고, 방치되며, 무시되어 왔지만 근대화가 심화됨에 따라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는 사회를 맞이하게 되는데, 올리히 벡은 이를 위험사회라 부른다. 글로벌 식량체계는 근대화와 함께 성장해오면서 근대적 위험을 키워왔다는 점에서 올리히 벡의 위험사회 논의가 가감없이 적용될 수 있다. 위험사회에 대한 올리히 벡의 논의는 글로벌 식량체계가 야기하는 먹거리 위험을 근대성의 지평에서 해석하고, 이에 대해 집합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공통의 담론적 기반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와 관련해 로컬푸드 운동은 글로벌 식량체계가 야기하는 위험에 저항하는 공통

투고일: 2015년 12월 1일, 심사완료일: 2015년 12월 29일, 게재확정일: 2015년 12월 30일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3A2044461). 논문의 내용은 2015년 4월 24일 경북대학교에서 개최된 지역사회학회, 2015년 5월 22일부터 25일까지 중국 남경농업대학에서 개최된 제13회 동아시아 농업사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발표문에 기초하여 작성한 것이다.

**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박사수료, taixun@naver.com

*** 전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석사과정, psh89love@naver.com

의 실천적 기반이 될 수 있다. 먹거리 위협에 대한 불안은 먹거리 위협의 보편성을 인지하고, 이를 야기한 사회구조, 글로벌 식량체계에 대한 저항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 사회적 합리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로컬푸드, 연대, 불안, 근대성, 위험사회

I. 서론

오늘날의 식품산업체계는 농수산물이 전지구적으로 이동하는 글로벌 식량체계라고 할 수 있다.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지역적인 자급경향이 강했던 곡물생산이 70년대 이후에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여러나라의 수입량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세계의 절반이 곡물수입국이 되고, 북미대륙과 유럽 등이 곡물수출국으로 부상했다. 게다가 이제는 하나의 기업이나 기업집단이 다양한 사업부문들을 수평적으로 통합하고, 종자에서부터 곡물, 육류의 생산, 식품으로의 가공, 유통까지의 단계를 수직으로 통합하는 농식품복합체(agri-food complex)가 농업생산자로부터 최종 소비자까지를 묶는 중심적 역할을 하면서 농업생산과 소비의 과정이 국경을 넘어서 이루어지는 글로벌 식량체계를 형성하고 있다(윤병선, 2008b). 이제 우리는 세계 각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글로벌 식량체계로 인해 세계 곡물시장의 안정성이 흔들리고, 식품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농업과 농촌공동체의 유지가 위협받고 있다.

로컬푸드는 글로벌 식량체계가 야기하는 이러한 사회적 위험에 대해 하나의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로컬푸드는 일정한 지리적 거리 안에서 먹거리의 생산과 가공, 소비가 이루어지는 체계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지역식량체계로서 로컬푸드는 기본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에 기초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로컬푸드는 철저히 지역농업에 기반함으로써 생산자인 지역농민들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는 한편, 유통단계를 최소화하거나 직거래를 통해 소비자에게 구매하는 농산물이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의 사회적 거리를 줄이고자 한다(홍경완 외, 2009: 1641-1642). 이제 로컬푸드에서 ‘로컬’의 의미는 점차 공간적 의미에서의 물리적 거리보다는 장소에 뿌리를 둔 다양한 상호 관계들이 관건이 되고 있다(Sonntag, 2008: 28-29). 특히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로컬푸드는 한정된 지리적 조건 때문에 국가 전체와 지역 사이의 물리적 거리는 크게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지 않는다. 오히려 로컬푸드는 이제 농산품 생산자와 소비자의 사회적 거리를 줄여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의 신뢰관계 속에서 생산과 소비가 함께 경제적인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공동체를 만드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로컬푸드는 단순한 식품체계를 넘어 지역 주민의 연대와 신뢰 형성을 지향하는 사회운동으로까지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운동으로서 로컬푸드 운동이 사회적 연대와 신뢰의 구축을 목표로 한다면, 운동의 목표는 이러한 공동체적 가치를 내면화하지 못한 참여자들이 집합적으로 동조할만큼 충분히 현실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집합적 연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로컬푸드 운동은 우선 운동참여자들 각각의 이해관심들이 충돌하지 않는 공통의 현실적 동기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로컬푸드가 글로벌 식량체계가 야기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대안으로서 등장했다는 배경을 고려할 때, 로컬푸드 운동에 참여하는 이들의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식량체계가 야기하는 위협들에 대한 불안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고는 로컬푸드 운동에서 연대형성의 문제에 대해 위험사회와 불안의 연대에 대한 울리히 벡(Ulrich Beck)의 논의를 빌어 그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로컬푸드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

국내의 로컬푸드 논의는 ‘우리 몸에는 우리 농산물이 제일’이라는 ‘신토불이(身土不二)’ 캠페인이나 유기농업 운동의 형태로 유지되던 활동이 영세농들에 대한 지역자치단체의 농민정책의 일환으로, 더 나아가 녹색성장과 사회적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정책화·제도화되는 과정 속에서 명실공히 공공담론으로 부상하게 되었다(김철규, 2011; 나영삼, 2011). 이와 함께 국내에는 아직 초기단계이긴 하지만 자생적인 농민시장, 공동체지원농업(CSA: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¹⁾ 지역먹거리를

1) 본래 공동체지원농업의 원형은 일정 규모의 소비자 회원들이 연간 생산될 농산물의 일부를 계약 방식으로 미리 투자·구매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농가의 위험부담을 함께 지는 형태였으나(김철규, 2011), 국내의 공동체지원농업은 비교적 소극적인 형태로 생산자 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제철농산물이나 1차 가공 먹거리를 꾸러미 형태로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직거래

이용한 학교급식, 지역농산물의 가공·유통·판매를 중심으로 한 자활사업 등 다양한 유형의 ‘로컬푸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나영삼, 2011).

농업의 글로벌화에 대한 대안농업 운동으로서 외국의 슬로우푸드 운동이나 공동체지원농업 운동을 소개하는 연구들(김종덕, 2002; 김홍주, 2004)은 이전부터 있어왔지만, 보다 체계화된 의미의 로컬푸드에 대한 논의들은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김철규, 2011). 로컬푸드와 관련된 학술적 논의들은 주로 글로벌푸드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왔다. 특히 로컬푸드는 원거리 수송을 위한 화석연료의 낭비로 환경오염을 초래하거나, 약품이나 방사선 처리로 식품안전성을 위협하는 등 글로벌푸드가 야기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계화와 화학화를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산업화된 농업이 등장함에 따라 다양한 화학비료, 농약으로 인한 환경파괴가 진행되고 있으며 농업이 규모화함에 따라 농업 다양성이 약화되고 있다. 또한 안전성이 명확하게 판명되지 않은 유전자 조작 식품을 유통하는 초국적 농식품 기업의 횡포, 광우병 등의 다양한 식품안전성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업 생산 내부에 자본주의적 경영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대다수 가족 소농이 몰락하고, 농업부문에 금융자본과 투기자본이 개입함에 따라 안정적인 농산물 가격 형성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김종덕, 2002; 2007a; 2007b; 2008; 박민선, 2008; 장상환, 2012).

김종덕(2007a; 2008; 2009)은 농업의 세계화 속에 나타나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지역식량체계에 기반한 로컬푸드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그는 농업규모화와 첨단기술 및 친환경농업의 확산에 기반하고 있는 기존의 국내 농업정책 노선이 국내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하고, 그 방향을 지역식량체계 확산의 방향으로 돌릴 것을 제안한다(김종덕, 2007a). 이에 따르면 지역 식량체계에 기반한 로컬푸드는 유통과정에서 이동거리가 짧기 때문에 긴 푸드마일(food mile)로 인한 안전성 문제나 에너지 낭비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며, 글로벌푸드로 공동화된 지역농업에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영세농들의 생계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일자리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김종덕, 2007a; 2008; 김미숙, 2012). 또한 지역 식량체계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피드백이 가능해 생산자가 소비자의 필요에 맞추어 생산하는 것이 가능하며 관련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다(김종덕, 2007a).

그러나 그러기 위해선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이러한 지역식량체계는 기본적으로 생산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나영삼, 2011).

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기는 신뢰에 바탕을 둘 필요가 있다(김종덕, 2007b). 게다가 단순히 어떤 특정 지역에 국한된 지리적 근접성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작용을 만들어 내는 충분조건은 아니다. 따라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피드백과정을 만들어내고 신뢰를 구축하는 작업이야말로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핵심적인 과제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의 로컬푸드 연구는 생산자와 소비자라는 구분을 넘어 지역적인 연대를 구축하는 과제가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지역농산물의 생산과 소비 문제를 넘어 그 구성원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아니라 지역주민으로서 함께 지역 먹거리의 바람직한 관계를 구축해나갈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할 것을 강조한다(네모토, 2014). 이는 칼 폴라니(Polany, 2009)를 따라, 스스로가 뿌리박고 있는 사회적 관계들로부터 탈구됨으로써 사회붕괴를 야기하는 자기조정적 시장을 다시 사회적 관계들에 재고착화(re-embedding)하려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Starr, 2010; 김철규, 2011; 이해진 외, 2012). 이와 관련해 나영삼(2011: 18)은 로컬푸드를 보다 광의의 의미에서 “세계화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바탕으로 지역과 농업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실천과정으로서 로컬푸드 시스템을 구축하는 운동이며, 또한 지역자치·자립·지역주민의 연대와 협동의 관점에서 먹을거리(food)를 매개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관계’를 맺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관계를 강조하는 이러한 관점 하에서 ‘로컬’이라는 장소에 대한 이해는 이상 단순히 어떤 ‘위치로서의 장소’가 아니라, 장소-기반 행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현장으로서의 장소’로 나타난다(이희상, 2012).

Ⅲ. 국내 로컬푸드의 유형과 현황

국내의 로컬푸드는 크게 일정 공간에서 로컬푸드를 직접 판매하는 직판(direct selling) 유형과 꾸러미 형태로 소비자들에게 주기적으로 전달하는 꾸러미사업의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지역산 식재료를 중심으로 유통 및 소비를 조직화하는 시도나 자치단체의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기반으로 학교급식에 지역산 식재료를 조달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로컬 푸드의 공급이 확산되고 있다.

직판의 형태는 주로 농민시장과 직매장의 형태로 나타난다. 농민시장은 생산자들이 직접 자신의 농산물을 가지고 나와서 판매하는 형태로 서구형 직판을 모델로 하고 있고, 직매장은 일본의 직판장을 모델로 하여 국내 여건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윤병선 외,

2013). 농민시장의 사례로는 원주새벽시장, 청주농민장터, 완주농민장터, 옥천 금요장터, 제주착한장터, 장흥토요장터, 천안목요장터 등이 있다. 대표적으로 원주새벽시장의 경우를 살펴보면 1994년 하천둔치를 직거래 장터로 이용하기 시작했던 것이 2010년 원주시가 이에 대한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정은미, 2011; 윤병선 외, 2013). 원주새벽시장은 생산자가 직접 가격을 책정하고, 4월 중순부터 12월 초순까지 새벽 4시부터 9시까지 매일 개장되기 때문에 소비자와 상시적인 관계가 형성된다는 특징이 있다(윤병선 외, 2013).

로컬푸드 직매장의 경우, 2012년 4월 용진농협이 운영하는 ‘완주 로컬푸드’ 1호 매장을 개장한 이래로 2014년까지 전국 총 71개소로 급증하였다(윤병선 외, 2013; 『중앙일보』, 2015. 3.26). 로컬푸드 직매장은 생산자 입장에서 직접 가격을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안정된 가격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소비자 입장에서 지역농가에서 생산자 실명제를 통해 제품을 납품하고 판매하며 매장내 잔류농약검사가 가능한 설비도 갖추고 있어 신선한 농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늘어난 소비자 수요와 함께 매장수도 급증하고, 매출도 2012년 64억원에서 2014년 1,704억원으로 26배나 늘어났다(『중앙일보』, 2015. 3.26). 반면, 직매장 사업의 과열 조짐에 로컬푸드의 중요한 가치인 ‘관계성’은 도외시한 채 지역농산물의 판매수단으로 전락하지 않을 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윤병선 외, 2013).

꾸러미 사업의 사례는 전국여성농민회 언니네 텃밭을 필두로 완주 건강밥상꾸러미, 등대생협 제철채소 꾸러미, 흙살림 꾸러미 등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인 언니네 텃밭 꾸러미사업은 2009년 3월 강원 횡성군의 여성농민회 5농가가 자신의 텃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서울의 소비자 21가구에 택배로 보내는 ‘제철꾸러미’ 사업으로 시작하였다(정은미, 2011: 204). 언니네 텃밭은 저농약 이상의 친환경 농산물, 마을 또는 면 단위의 생산자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공동계획·공동생산, 제철에 나는 농산물, 토종씨앗으로 키운 농산물이라는 원칙 하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http://www.sistersgarden.org/introduction/principle>). 직판 유형과 달리 이러한 꾸러미 사업은 거리가 가까운 지역소비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언니네 텃밭 제철꾸러미의 경우, 소비자 회원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지역의 생산자 공동체에 우선적으로 배정되지만, 지역농산물 공급의 사각지대인 수도권, 도심은 권역을 나누어 전국적으로 연결하고 있다(정은미, 2011: 204-207).

그 외에도 사회적 기업으로 지역농산물을 구입해 독거노인과 저소득가구에 밑반찬을 만들어 제공하거나(막퍼주는 반찬가게)나 지역 식재료로 콩비지 버거나 쿠키, 도시락 등

을 만들어 판매(생명살림 올리)하는 등 지역산 식재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유통과 소비를 조직해내려는 시도도 있다. 학교급식에 지역의 친환경 식재료를 조달 공급하는 사례도 있다. 학교급식은 특히 전남 나주시가 2003년 전국 최초로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한 이래, 전국적인 학교급식 조례제정운동으로 확대되어왔다.

이러한 사례들은 로컬푸드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들이 매개가 되었을 때 충분히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원주의 새벽시장이나 친환경급식 프로그램 등은 오랫동안 지역에 뿌리를 둔 다양한 협동조합운동이 지역먹거리 운동에 동참하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윤병선 외, 2013; 이해진 외, 2012). 언니네 텃밭의 제철 꾸러미 사업은 전국여성농민회가 사업을 총괄하고, 소비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물리적인 거리보다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관계성, 지속성을 유지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사회적 거리를 좁히는 것을 사업의 핵심적 과제로 삼고 있다(정은미, 2011: 204-207).

IV. 불안의 연대와 위험사회론

1. 로컬푸드 운동에서 신뢰와 연대 형성의 문제

로컬푸드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바탕으로 할 때, 시스템이자 제도로서의 로컬푸드와 사회적 관계의 회복과 신뢰형성을 목표로 하는 로컬푸드운동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로컬푸드의 사회적 관계와 배태성, 신뢰를 강조하는 최근의 연구경향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역 사회의 구성원들이 이러한 공동체적 가치에 동조하고, 그 안에서 이를 추진해가는 구체적인 과정이나 전략들을 분석한 연구들은 많지 않다. 하지만 사회적 관계의 회복과 신뢰형성의 과정에 주목하는 몇몇 연구들은 로컬푸드의 공동체운동 또는 사회운동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이해진 외(2012)는 원주 지역 협동조합이 설립 이래 지역 경제의 자립을 목표로 다양한 사회운동과 사업을 통해 그 성과와 가능성을 경험하고 축적해왔으며, 원주 지역의 로컬푸드 운동은 이에 대한 구성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확산되어 왔음을 지적한다. 특히 협동조합운동이 로컬푸드가 가진 지역공동체적인 가치에 동조하며, 새로운 지역사회운동의 일환으로 생활협동조합이 다양한 로

컬푸드 운동을 추진해가는 과정을 추적한다. 이처럼 생산과 소비의 시스템이나 정책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관계의 회복과 신뢰 형성을 목표로 할 때 로컬푸드를 둘러싼 실천들은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며, 상호작용하는 사회운동의 성격을 가지는 듯 보인다.

무엇보다 지역식량체계에 필요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 및 상호성은 물리적·경제적 관계가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가치들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는 매우 섬세한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기 때문에 정책이나 제도, 시스템을 통해 구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김철규, 2011). 오히려 로컬푸드의 시스템 및 제도적인 측면이 과도하게 강조될 경우, 지역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묶어주는 이러한 사회적 가치들이 오히려 훼손될 여지가 있다. 이러한 사례로 허남혁(2009)은 국내산 친환경 농산물을 유통하는 생활협동조합이 전국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대규모의 물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집중해왔으며, 생산자-소비자 간의 관계가 일반 유통시장과 다를 바 없이 관행화되고 제도화되어왔음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김철규(2011)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인한 과잉제도화가 로컬푸드가 지향하는 가치를 탈각하고 관료주의적 전유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

하지만 거꾸로 로컬푸드 운동이 신뢰와 같은 사회적 가치나 사회적 배태성(embeddedness)을 과도하게 강조할 경우, 로컬푸드 운동은 그 현실성을 잃을 것이다. 데니스 룡(Wrong, 1961)은 사회적 배태성이 사람들이 합의하여 발전시킨 규범이나 가치체계, 타인의 인정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과잉사회화할 경우, 다양한 상황맥락이 무시된 채 사회적 영향력을 인간의 행동유형에 내면화시켜 행위자를 원자화함으로써 현실설명력을 잃게 된다고 비판한다(Granovetter, 1985). 또한 힌리히(Hinrichs, 2000)는 사회적 배태성이 시장성(marketness)을 배제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를 시장성이나 도구주의(instrumentalism) 개념과 함께 고려할 때 보다 유용하고 의미있는 개념이 될 수 있다고 본다.²⁾ 따라서 로컬푸드 운동에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와 공동체적 가치를 과도하게 부여할 경우, 이러한 가치는 운동에 참여하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실제적 동기와 괴리된 채 추상적이고 이념적인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신뢰와 상호성 같은 공동체적 가치는 이를 내면화하지 못한 참여자들이 단기간에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추구할 수 있을만큼 쉽게 형성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신뢰형

2) “달리 말해서, 배태성이 시장성과 도구주의의 대척점에 서있는 경우는 별로 없다. 그러한 경제사회학 분야에서의 시장에 대한 비판은 다양한 경제적 형식 속에서 사회적 연결망들과 문화에 주목해왔다. 배태성에 대한 보다 비판적인 관점은 가격이 여전히 문제일 수 있으며, 활발하고 유의미한 사회적 유대 속에서도 때로는 이기심이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Hinrichs, 2000: 297).”

성이라는 목표하에 운동구성원들을 집합적으로 묶어주는 공통의 프레임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다. 정동일(2012)은 로컬푸드 운동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소비자주의 운동의 성격, 환경보호와 지역사회의 경제적 자립을 강조하는 사회개혁운동의 성격, 공동체의 신뢰와 연대를 회복하기 위한 공동체운동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실제 생산자인 농민은 오히려 로컬푸드를 농민의 자립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며, 소비자는 로컬푸드를 친환경 유기농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통로의 하나로 보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운동참여자들이 처한 사회적 위치에 따라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들이 달라지며, 물질적·경제적 동기는 사회운동 참여자들이 처한 사회적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끄는 편파성 때문에, 로컬푸드 운동에 참여하는 구성원들간의 공통의 동기를 형성하기는 힘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로컬푸드가 글로벌 식량체계가 야기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대안으로서 등장했다는 배경을 고려할 때, 운동에 참여하는 이들의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식량체계가 야기하는 위험들에 대한 불안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이해관심보다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한 불안은 장기적으로 볼 때 연대형성으로 가기 위한 운동구성원들의 공통의 출발점으로 더 현실성이 있어 보인다. 물론 생산자, 소비자, 또는 활동가 집단의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이 동일하게 글로벌 식량체계가 야기하는 위험에 대한 불안에 기인한다고 하더라도 이들 각각의 집단이 지각하는 위험은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생산자인 농민에게는 생산한 농산물의 불안정한 판로와 시장가격이야말로 생존권을 위협하는 위험으로 지각되고, 소비자에게는 불확실한 식품 안정성이 가장 큰 위협으로 다가오며, 활동가에게는 농촌 공동체의 유지가 위협받는 상황이야말로 무엇보다 큰 위협으로 지각될 것이다. 이러한 위험 인식의 상대성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대한 심리적 불안이 과연 집합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위험사회에 대한 울리히 벡의 논의는 위험에 대한 불안이 불안의 연대로, 집합적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듯 보인다.

2. 근대적 먹거리와 위험사회론

더글라스와 윌다브스키(Douglas and Wildavsky, 1993: 11-26)는 위험에 대한 심리적 불안이 외부의 자극에 대한 어떤 심리상태이기 이전에 위험을 지각하고 평가하는 인식론적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 그들에 따르면 모든 사회는 확신과 공포의 조합에 의존하고 있으며 사회적 삶의 형식에 따라 어떤 위험은 높게 평가하고 다른 위험들은 낮게 평가하는 문화적 슐림이 나타나게 된다. 특히 메리 더글라스(Douglas, 1997[1979])는 어떤 대상도 그 내재적 특성이나 내적 논리에 의해 오염된 사물이나 위험한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으며, 이는 항상 우리가 가진 분류체계의 부산물이라고 말한다. 위험하거나 불결한 사물이 위험하거나 불결한 이유는 그 사물이 우리의 인식의 틀에서 위험이나 오염의 관념을 부여받기 때문이다. 즉, 위험에 대한 지각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행위가 아니라 적극적인 사회적 과정인 것이다.

더글라스의 논의를 따르면 위험에 대한 지각과 평가는 서로 다른 사회의 문화체계에 따라 상대적인 평가도식에 기반하며, 뿐만 아니라 고도로 분화된 현대사회에서는 각자가 처한 사회적 위치에 따라 위험에 대한 지각과 평가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위험에 대한 심리적 반응인 불안은 사회적인 위치에 따라 인식론적으로 편향된 지각과 평가의 틀에 달려오는 부수적 결과물일 수 있다. 하지만 울리히 벡은 현대사회에서 위험에 대한 불안이 단순히 개인의 심리적 문제나 집단적 인식의 편향성 문제에 국한될 수 없다고 본다. 현대사회의 위험은 더 이상 인식 상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며, 울리히 벡은 이를 근대/근대성(modern/modernity)이라는, 현대사회의 위험에 대한 다양하고 상대적인 인식들의 동일한 사회적 지평을 드러냄으로써 보다 분명하게 나타내 고자 한다. 위험에 대한 심리적 불안은 개인적이다. 하지만 그 불안을 야기하는 위험은 사회구조적이기 때문에 집합적이고 공적인 문제로 확대될 수 있는 정당성을 가진다.

울리히 벡은 현대사회의 위험을 전통적 위험과 질적으로 다른 근대적 위험으로 구분한다. 전통적 위험이 자연환경이나 과거로부터 전해내려온 전통적인 문화구조로부터 우발적으로 나타나는 사건들에 기반한다면, 근대적 위험은 자연을 정복하고, 전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근대화 과정, 특히 생태적 위험이나 핵위험, 금융위험 등과 같이 근대적 합리성과 지식 그 자체로부터 야기된 위험을 가리킨다.³⁾ 벡은 위험(risk)을 위난(danger)·위해(hazard)·위협(threat)⁴⁾과 구분한다. 위난·위해·위협이 공간적, 시간적, 사회적으로

3) 루만(Luhmann, 1988)의 경우 위난(danger)과 위험(risk)을 구분한다. 그에 따르면 위난과 달리 위험은 미래에 일어날 피해의 가능성이 자신의 결정에서 비롯된 경우에 해당한다. 벡은 한편으로 이를 전통적 위험과 근대적 위험을 구분하는 개념으로 확장해 사용하는 듯 보인다. 벡에게 근대적 위험은 근대성 자체로부터 야기되는 위험을 말한다. “중래의 위난(danger)들에 대립되는 것으로서 위험은 근대화가 지닌 위협적 힘 및 그 의심스러운 지구화와 결합된 결과이다(Beck, 2006: 56).”

현실화된 위험이라면, 위험은 오히려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세계상황과 관련하여 잠재적으로 존재한다(Beck, 2010: 30). 따라서 위험은 “본질적으로 미래의 구성요소를 표현(Beck, 2006: 73)”하며, 다가올 미래의 재앙으로서 기대하고 예상되는 사건으로 존재한다. 근대적 합리성은 합리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수행의 결과물에 대한 일정 정도의 무지를 포함하며, 근대적 위험은 그러한 잠재적인 부수효과를 가리킨다. 따라서 근대적 위험은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미래의 사건과 관련되어 있으며, 근대적 합리성의 수행과정 속에서 예측하지 못한 부수적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인식의 틀을 벗어나 있다.

올리히 벡은 근대화 과정이 초기부터 부의 증가와 함께 이러한 위험이 증가하는 과정이라고 본다. 하지만 근대 초기에는 이러한 위험이 단지 ‘잠재적인’ 부수효과로 분명히 인지되지 않은 채 무시되거나, 보험과 같이 화폐가치를 통해 가시적인 부로 ‘번역’해내는 방법을 통해 해소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근대화가 심화됨에 따라 자연의 정복과 전통으로부터의 해방 속에서 “과거는 현재에 대한 규정력을 상실(Beck, 2006: 74)”하며, 근대적 위험이 보다 체계적이고 무제한적으로 생산되면서 그동안 미래로 지연되고, 방치되며, 무시되었던 위험이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는 사회를 맞이하게 되는데, 올리히 벡은 이를 위험사회라 부른다. 위험사회의 위험은 핵위험과 같이 더 이상 화폐가치로 번역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수준으로 나타난다. 무엇보다도 위험이 얼마나 치명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누구에게 닥치게 될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위험은 합리적으로 대비 불가능한 위험이며,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숙명론적 위험이다.

글로벌 식량체계는 근대화와 함께 성장해오면서 근대적 위험을 키워왔다는 점에서 올리히 벡의 위험사회 논의가 가감없이 적용될 수 있다. 전통적인 식량체계는 일반적으로 상당비율의 인구가 식량생산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였으며, 그 규모도 제한적이었다. 유통과 소비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식량의 공급은 계절에 따라, 그리고 지역에 따라 그 종류와 양이 제한되었다. 그러나 근대화 과정을 거치며 전통적인 식량체계 역시 매우 큰 변화를 거치게 되는데, 우선 산업화와 함께 진행된 도시화는 도시를 중심으로 먹거리를 자족하지 못하는 거대한 수요층을 형성하게 된다. 이는 농업의 규모화와 산업화를 촉진시켜 식량생산의 비약적인 성장을 이룬다. 유통부문에 있어서도 거대한 상업시장이 형성되고, 운송수단의 확장과 저장 기술의 발달로 돈만 있으면 누구

4) 여기서 언급하는 위난(danger), 위해(hazard), 위협(threat)은 영어판 『위험사회』의 번역어이며, 모두 동일한 독일어 Gefahr의 영어 번역어이다(Beck, 2006: 15).

든지 필요한 먹거리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근대적인 식량체계는 근대화 과정 속에서 나타난 도시의 식량문제를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Beardsworth and Keil, 2010[1997]: 60-64).

문화적인 차원에서 식재료를 다루는 방식들, 식재료에 대한 사회문화적 의미와 선호, 식사 매너 등 식재료를 둘러싼 우리의 실천들도 크게 변화를 겪었다. 이제 음식을 보존하기 위해 굳이 염장을 하지 않아도 되고, 음식을 익히는데 각종 수고를 덜게 되었다. 먹어도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구분하는데 있어서도 각종 금기나 미신에 의존하기 보다는(Harris, 2012), 점점 더 위생학과 식품영양학의 지식에 의존하였다.

하지만 거대한 상업시장이 형성되고 이를 통해 생산된 농산물이 유통됨에 따라 이때부터 이미 시장의 불안정성에 따른 위험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 사회적 현상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는 방식은 달랐지만, 뒤르켐(Emile Durkheim)은 근대 초기에 나타났던 이러한 위험들을 이미 예민하게 감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뒤르켐에 따르면, 사회분화가 진전될수록 고립된 환절형 사회들이 융합되면서 거의 모든 사회를 포괄하는 단일 시장이 만들어지고, 이 거대한 규모의 시장에서는 적절한 규제와 시장질서 속에서 생산이 이루어지지 못해 산업적·상업적 위기나 파산과 같은 경제적 아노미가 발생하게 된다(Durkheim, 2012: 527-549). 마찬가지로 그는 산업사회에서의 자살 현상에 대한 연구를 통해 아노미 현상의 사회심리적 측면에도 주목하는데, 그는 이러한 심리적 아노미를 욕망을 규제하는 사회도덕이 적절히 기능하지 못해 발생하게 된다고 보았다(Durkheim, 2008).

또한 시장 경제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는 점은 수요-공급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가격신호에 따라 자원의 배분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메커니즘인데 농업 생산은 농산물의 수확까지의 생산주기가 보통 1년 정도로 길기 때문에 공급 불안정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 또한 농산품, 특히 곡물의 경우는 그 상품의 특성상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매우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공급의 힘의 논리가 제대로 작용하기 힘들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즉, 가격 변화에도 불구하고 곡물의 수요량은 거의 변하지 않는 반면 그 공급량은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불가피하게 변동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지기 위한 최적의 가격 형성이 어렵다.

근대 초기에는 시장의 불안정성이라는 위험은 농산물 생산자인 농민들에게는 직접적으로 가시적인 위해로 나타나지만, 식품안전성과 관련된 위험은 아직 잠재적인 형태로 남아있다. 하지만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가시적인 부 앞에서 비가시적이기 때문에 인지하기 어려운 이러한 위험은 무시되고, 위험과 위해가 번성하는 사회적 토대가 된다(Beck,

2006: 90-91). 게다가 2-3세기에 걸친 오랜 근대화 과정 속에서 조금씩 가시화되는 위협을 다양한 방식으로 해소해 온 서구 국가들과는 달리 산업화와 근대적 제도의 구축과정을 불과 3-40년 동안에 밟아온 한국사회(Chang, 2009)⁵⁾에서는 많은 경우, 농촌사회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위협들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대응하기 보다는 경제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개별 농가들이 이러한 위협을 떠맡게 되었다.

근대적 식량체계의 형성과 함께 농촌과 도시를 중심으로 생산과 소비의 분리가 나타났지만, 그럼에도 근대화 초기에는 지역농촌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도시에서 소비함으로써 생산과 소비를 통해 도시와 농촌의 상호의존관계가 유지되었다. 하지만 근대화가 심화됨에 따라 근대적 식량체계는 지역적 상호의존관계를 벗어나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재조직된다. 이러한 과정 하에 나타난 글로벌 식량체계는 세계 각 지역에서 각기 독립적으로 유지되어오던 식량사슬을 세계적인 규모로 품목, 지역, 영역별로 분화시키는 통합적 모델이며, 글로벌 식량체계로의 변환은 그 자체로 국경을 초월하여 농민으로부터 소비자에 이르는 사회의 모든 참여자들을 시장을 매개로 연결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농산품의 산지로부터 소비자의 식탁에까지 오르는 그 일련의 과정에 개재하는 자본들의 영역확대가 특정 지역이나 국가를 초월해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위협의 파급력 역시 전 세계적인 규모로 나타나게 되었다.

올리히 벡은 이러한 위협에 대한 지각이 개인의 심리적인 수준에선 불안으로 나타난다고 본다. 불안이라는 심리상태를 위협과 직접 관련지었던 선구자로는 프로이트를 꼽을 수 있다. 프로이트(Freud, 2003a[1920]: 276)는 불안을 어떤 위협을 예기(豫期)하거나 준비하는 심리적 상태라고 보았다.⁶⁾ 프로이트에게 불안은 개인이 심리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갑작스런 심한 외적 충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으로 나타난다. 그에 따르면 불안은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외적 충격에 대비해 그에 비길만한 심적 에너지를 미리 집중시켜놓음으로써 트라우마적 사건과 맞닥뜨리더라도 그 정도를 완화

5) 한국사회의 압축적 근대화의 결과 선진국형 위험요인과 후진국형 위험요인이 동시에 공존하는 상황을 장경섭은 ‘복합위험사회(complex risk society)’로 규정한다(장경섭, 1998; Chang, 2009).

6) 프로이트가 말하는 불안은 벡이 말하는 위협과, 그리고 경악과 공포는 위난이나 위해, 위협과 관련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악(Schreck)**, **공포(Furcht)**, 그리고 **불안(Angst)**이 동의어적 표현으로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것들은 사실상 이들 각각이 위협과 맺는 관계 속에서 분명하게 구분될 수 있다. **불안**은 설령 그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일지라도 어떤 위협을 예기하거나 준비하는 특수한 상태를 일컫는다. **공포**는 두려워 할 지정된 대상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경악**은 어떤 사람이 준비태세가 되어 있지 않은 채 위협 속에 뛰어 들었을 때 얻게 되는 상태에 붙여진 이름이다(Freud, 2003a[1920]: 276).”

해주는 일종의 방어기제로 작동한다.⁷⁾ 따라서 불안이라는 심적 보호막은 오직 외부의 자극, 즉 위협이 주는 심리적 자극과 관련해서만 존재하며, 내면의 본능적 욕구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본다(Freud, 2003b[1926]: 216). 그렇다면 불안은 이러한 소극적인 심리적 방어기제를 넘어서 적극적인 집합적 연대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하지만 일단 위협은 그 비가시성 때문에 일상생활의 일차적 경험 속에서 인지되기 어렵다. 위협은 일상적 경험과 단절된 과학적 지식을 통해서, 화학공식이나 생물학적 지식, 의학적 지식 등을 동원함으로써 가시화될 수 있다. 물질적 궁핍의 상황은 객관적인 물리적 상황과 이에 대한 주관적인 경험, 물질적 궁핍의 고통이 서로 떼려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불안은 지식을 매개로 해서만 객관적인 위협에 대한 지각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근대 초기에 과학은 자연이 주는 위협, 전통적 삶의 방식 곳곳에 숨어있는 위험들을 가시화하고 제거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전통적인 식량체계에 대해서도 과학기술, 생물학적 지식 등은 작물 또는 육류 생산에서 나타나는 불확실성을 하나하나 제거해나갔고, 운송 및 저장 기술은 유통, 관리의 불확실성과 부패의 위협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제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여섯가지 영양소, 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물이 골고루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각 영양소의 필수 섭취량이나 각종 질병에 적합한 식이요법에 대한 정보도 쉽게 접할 수 있다. 전통적 위협에 대한 불안은 이처럼 과학적 지식을 통해 위협이 해석되고 제거되는 과정 속에서 해소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전통적 위협에 대처하기만 하면 되던 시기는 지나갔다. 오늘날 새롭게 부상한 근대적 위협의 문제는 단순히 과학적 지식의 문제로 환원될 수 없다. 오히려 과학은 현대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위협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과학이 바로 그 위협의 기원과 성장에 주도적으로 개입해 있기 때문이다(Beck, 2006: 112).” 게다가 현대사회는 우리를 위협하는 온갖 위협들에 대한 정보들로 넘쳐난다. 이렇듯 모든 위협에 대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위협에 관심을 집중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이는 위협과 관련한 지식에의 접근가능성, 예상되는 위협의 유형이나 피해의 정도, 그리고 위협으로 인해 누가 고통을 받는지 등의 사안들과 관련이 있다. 예상되는 위협은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한 고려되는 위험순위에서 밀려난다. 충분히

7) 프로이트는 언뜻 보기에는 쾌락원칙을 위배하고 불쾌를 추구하는 듯한 반복강박증을 설명하기 위해 이러한 심적 메커니즘을 도입한다. 그에 따르면 어떤 외상적 사건과 조우한 결과 심리상태의 균형이 무너질 때, 심적 메커니즘은 일부러 불안 상태를 만들어 마음 속으로 외상적 상황을 재현해 내 그 에너지를 구속하려 하는 시도를 반복적으로 행하게 된다(Freud, 2003a[1920]).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유독 화학물이나 유전자 조작의 위험에 노출되었을지 모를 식품들을 보다 확실하게 거부할 수 없을 것이다. 교육을 잘 받고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식품화학이 미치는 유해효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은 사회적으로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위험에 대한 지식들 자체도 완벽한 확실성 속에서 위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이끌어 내지 못한 채 그저 확률적으로만, 일련의 ‘시나리오’ 들만을 양산한 채 지식들끼리 과학의 자리를 두고 서로 경쟁한다는 것이다. 올리히 벡은 위험사회가 지식사회이기보다는 오히려 무지사회라고 말한다(Beck, 2010: 207-226). 이 때 ‘무지’는 실험실적 상황에서 통제된 어떤 대상에 대한 지식과 관련한 무지가 아니라 지식의 수행, 실천, 결정들이 스스로가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결과들에 대해 무지하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아직-알지-못함’이 아니라 알지 못한, 인식하지 못한 무지(Beck, 2010: 211)”이다. 유전자 변형 식품의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한 세랄리니(Gilles-Éric Séralini) 연구팀의 논문이 『식품과 독성학(Food and Chemical Toxicology)』에 실리기로 했다가 계재가 취소되었던 사건(『사이언스 온』, 2013.11.29)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위험에 대한 과학계의 평가는 외부의 개입으로부터 더이상 자유롭지 않으며, 학계 내에서도 점차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듯 보인다. 화학비료나 잔류농약의 문제도 ‘허용수준’이라는 말이 보여주는 것처럼 더이상 중독의 예방이 문제가 되기보다는 “동식물과 인간이 얼마나 많은 양 또는 적은 양의 유독물질을 견딜 수 있는가, 미량이 얼마나 큰 것일 수 있는가, ‘견딘다’는 것이 이 맥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의 문제(Beck, 2006: 120)”가 되고 있다.

올리히 벡은 과학이 위험을 규정하거나, 위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비합리적이라고 판정하는 관관노릇을 할 때 과학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다고 비판한다(Beck, 2006: 110-130). 근대적 위험의 불확실성을 우리가 인정할 때, 위험은 (그 수준을)평가해야 하는 지식의 대상이기 이전에 (그 수용여부를)결정해야 하는 합의의 문제일 수 있다. 과학은 사람들의 위험에 대한 인식의 편향성만큼이나 중립적이지 못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

8) 프랑스 칸대학의 세랄리니 연구팀은 2012년 몬산토의 유전자변형 옥수수와 독성 제조제 라운드업의 독성에 관한 실험결과를 발표했다. 논문은 유전자변형 옥수수를 먹인 쥐가 대조군보다 조기 사망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고, 학계에선 실험방법의 적절성에 대한 찬반논쟁이 일어났다. 이에 대해 학술지 『식품과 독성학』은 2013년 계재를 취소하였고, 이 과정에서 기업체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증폭되었다. 결국 세랄리니의 연구는 2014년 『환경과학유럽(Environmental Sciences Europe)』을 통해 재출판되었다(『사이언스 온』, 2013.11.29; 2014. 2.11; 2014. 6.26). 세랄리니 연구팀의 연구는 <http://www.gmoseralini.org>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험을 분류하고 평가하는 지식은 그 자체로 권력이기 때문이다. 불안이라는 심리는 위협에 대한 인식의 편향성으로 치부될 수 없다. 올리히 벡에게 위협에 대한 불안은 오히려 집합적 연대 속에서 사회적 합리성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으로 보인다.⁹⁾ 따라서 위협에 대한 과학적 지식은 사회적 논의와 비판 속에서 사회적 합리성을 획득해야 한다.

3. 불안의 연대로서 광우병 촛불시위

그렇다면 불안은 어떻게 집합적 연대를 이끄는 동력이 될 수 있을까? 위험사회에 대한 올리히 벡의 논의에 따르면, ‘이미-알고-있는’ 또는 ‘아직-알지-못한’ 위험과 달리 알지 못하는 위험으로 둘러싸인 사회에서 사람들은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목표로서 부”보다는 오히려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목표로서 “최악의 것을 예방하는데 관심”을 두게 된다(Beck, 2006: 97). 물질적 빈곤과는 달리 위험은 특정계층에 한정되지 않는다. 특히 근대적 위험은 현실화되었을 때, 그 피해로부터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며, 그 결과는 파국적인 수준으로 치닫곤 한다. 이러한 위험의 보편성은 위협에 대한 불안심리가 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준다.¹⁰⁾ 글로벌 식량체계가 야기하는 먹거리 위험 역시 특정 지역이나 계층에 국한되지 않는다. 먹거리 위험에 대한 사회적 불안심리는 실제로 2008년의 광우병 위험과 맞닥뜨렸을 때 사상초유의 대규모 시위를 이끌기도 했다.

1996년 영국의 광우병 사건 이래로 전세계적으로 광우병 파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은 광우병 위험을 둘러싸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중지와 재개가 반복되다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후 2008년 4월 18일 한미 쇠고기 협상이 급작스레 타결되었다. 촛불 집회는 2008년 5월 2일 저녁, 급식을 하기 때문에 광우병의 잠재적 피해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여중생들이 청계광장에 모여들면서 시작되었다(김철규·김선업, 2009; 홍성태, 2008). 이는 점차로 더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점차 대규모 시위로

9) 올리히 벡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불안(anxiety)의 공동성이 필요의 공동성의 자리를 차지한다. 위험사회의 유형은 이런 점에서 **불안에서 비롯된 유대**가 생겨나고 정치적 힘이 되는 사회적 시기를 보여준다(Beck, 2006: 98).”

10) 이는 물론 이러한 불안이 단지 개인의 신경증적 불안에 머무를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왜 위협에 대한 일부 반응은 정상적이고 일부 반응은 신경증적인가? 더 정확히 말해 현실적 불안과 신경증적 불안의 차이는 무엇인가? 프로이트의 답은 **현실적 불안**은 알고 있는 위협에 관한 것이고, **신경증적 불안**은 알지 못하는 위협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위협을 이해하는 데에서 우리는 불안은 단순히 대상없는 두려움이 아니라 대상 상실의 위협에 대한 특정한 반응이라는 단서를 얻는다(Salecl, 2015: 48-49).”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세대와 계층을 넘어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시위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시위에 참여한 주체들의 광우병에 대한 위험인식이 얼마나 객관적인 위험평가에 기초하고 있는지를 추궁하자면, 점차 확산되는 시위양상에서 비정상성을 보거나, 배후세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홍성기 외, 2009). 그러나 박희제(2004: 12-13)는 전문가의 위험평가와 일반시민의 위험인식 사이의 차이가 정보의 양과 질의 문제만은 아니며 쌍방향적인 위험정보소통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여기서 일반시민들은 더이상 위험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나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자가 아니다. 게다가 촛불시위가 객관적인 위험 평가 이전에 위험 수용의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러한 비판은 논의의 핵심을 비껴가고 있는 것이다.¹¹⁾ 이처럼 “사회운동은 위험 기술자들이 전혀 답하지 않는 문제들을 제기하며, 기술자들은 실제로 질문받은, 그리고 대중의 불안을 키우는 문제점을 놓쳐버린 답변을 제시한다(Beck, 1992: 30).” 실제 촛불집회는 ‘한미 쇠고기 협상’의 철회를 요구하며 시작되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비민주적인 대응방식에 시민들이 분노하며 점차 대규모 시위로 확대된 측면이 있다. 이 과정에서 집회의 의제 역시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국한되지 않은 채 그동안 부와 효율성의 논리에 의해 무시되어왔던 다양한 잠재적 위험들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라 확산되어 갔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합의과정이 과학적 합리성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광우병에 대한 시민들의 위험 인식은 어느 정도는,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과학에 의존하고 있다. 과학적 합리성은 무엇보다 이러한 근대적 위험에 대한 과학적 지식의 불확실성, 오류가능성을 인정하고, 불안의 원인이 되는 위험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제거하는 사회적 과정을 통해 진전될 수 있을 것이다. 벡은 이를 칸트의 표현을 빌려 “사회적 합리성 없는 과학적 합리성은 공허하며, 과학적 합리성 없는 사회적 합리성은 맹목적이다(Beck, 2006: 69)”고 지적했다.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는 위험에 대한 불안이 집합적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이미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심리적 불안에 기초한 집합적 행동이 그저 단순히 우발적인 사건으로 끝을 맺을지, 사회적 합리성의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분명하지 않다. 먹거

11) 이런 점에서 ‘과학적으로 100% 안전하다는 근거가 없다면 위험한 것이다’는 주장을 ‘비과학적 인식유형’으로 치부(홍성기 외, 2009: 36)하기보다는 ‘위험 수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우선성’을 주장한다고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하지 않을까?

리 위협에 대한 불안은 촛불시위가 사그러든 후에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SSK먹거리지속가능성 연구팀이 2011년에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촛불시위 이전인 지난 5년전과 대비해 먹거리 위협이 더 심각해졌다는 의견이 73.1%로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윤병선 외, 2013: 51).

하지만 그와 함께 먹거리 문제는 보편적인 시민의 관심사로 떠올랐고, 구체적인 실천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중고생들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기피는 물론 먹거리 문제 전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철규·김선업, 2009). 뿐만 아니라 먹거리 위협을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며, 먹거리 안전에 대한 정보와 소식에 관심을 가지고, 친환경 식품이나 국내산 농산물을 구입하려는 노력에 적극적인 소비집단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이해진, 2012).

V. 불안의 정치학

먹거리 위협은 이제 예상하고 대비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얼마나 치명적으로 닥칠지 알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에 대한 논의는 일정부분 막스 베버의 테제를 반복하고 있는 듯 보인다. 벡에게 있어 위협에 대한 이러한 근본적인 무지에서 오는 실존적 불안은 마치 막스 베버(Weber, 2010)의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종교적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칼뱅주의 교도들의 종교적 불안과 닮아있다. 베버가 이러한 종교적 불안을 자본주의의 경제적 합리성을 추동한 동력으로 분석했듯이, 벡은 근대적 위협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실존적 불안이 사회적 합리성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위험사회에 대한 울리히 벡의 논의는 무엇보다 이러한 우리의 실존적 불안이 향하는, 현대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한 위협, 특히 우리의 논의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식량체계가 야기하는 먹거리 위협을 근대성의 지평에서 해석하고, 이에 대해 집합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공통의 담론적 기반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또한 위협이 점차 일상적인 경험의 수준에서 보지 못하고 지각할 수 없는 것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오늘날의 과학에게, 그리고 지식인들에게 새로운 역할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 듯 보인다. 과학적 지식이 위협을 야기하는 스스로와 대면하고 성찰적이 될 때,

과학적 권위의 신화로부터 벗어나 보다 높은 수준의 합리성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사회과학을 포함한)과학은 우리의 불안들이 새롭게 지각한 위험들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제거할 방법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글로벌 식량체계가 야기하는 위험들을 가시화하고, 이를 회피할 방법을 모색하는 지식인들 역시 글로벌 식량체계의 위험에 저항하는 실천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로컬푸드 운동은 글로벌 식량체계가 야기하는 위험에 저항하는 공통의 실천적 기반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먹거리 위험에 대한 불안은 먹거리 위험을 야기한 사회구조, 글로벌 식량체계에 대한 저항으로 직접적으로 향할 때 사회적 합리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올리히 벡에 따르면 근대적 위험은 그 자체로 보편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위험은 일시적으로는 계층이나 사회적 위치에 따라 불균등하게 분배될 수 있지만 근대적 위험이 확장됨에 따라 위험은 자신을 생산했고 이로부터 이득을 얻었던 본거지로 되돌아가는 ‘부메랑 효과’를 보이며 보편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Beck, 2006: 78-80). 글로벌 식량체계가 야기하는 위험들 역시 특정 집단에 한정되지 않는다. 생산자인 영세농민의 몰락은 결국 소비자의 먹거리 위험을 가중시키며, 농민은 생산자이자 동시에 소비자이기 때문에 글로벌 식량체제로 인한 유해 농산물에 노출될 위험으로부터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생산자나 소비자 할 것 없이 현대사회에서 먹거리의 생산과 소비를 둘러싼 먹거리 위험의 보편성을 인지하고, 각자가 대안적인 먹거리 체계를 능동적으로 모색하는 주체로 운동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해진(2012)은 주어진 먹거리를 수동적으로 선택, 구매하는 종속적 소비자가 아니라 음식점에서 먹거리의 생산지와 가공방식을 묻고, 먹거리와 관련된 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소비자를 먹거리 시민으로 분류한다. 마찬가지로 생산을 규모화하기보다 공유우사나 공유농기계 사용으로 생산을 조직화하거나 순환농업의 방식을 다양하게 모색하는 등 먹거리 위험을 만들어내는 생산방식을 거부하는 생산자는 단순히 생산자를 넘어 공동체의 가치를 실천하는 활동가이기도 하다.

위험은 언제든지 현실화하기를 기다리며 잠재적인 방식으로 존재하며, 우리는 위험이 현실화할 미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위험은 언제나 비가시적인 형태로 존재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은 허구가 아니다. 일년 내 피땀흘려 지은 농작물이 시장가격의 폭락으로 한순간에 쓰레기가 된대거나 유해 식품에 노출되어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험은 생생한 존재론적 지위를 획득한다. 위험사회라는 조건은 위험으로 인해 고통받을 수 있는 이들 모두에게 운동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논문 및 단행본>

- 김미숙(2012), 「건강육구와 로컬 푸드 운동: 전북 익산시의 로컬 푸드 판매를 중심으로」, 『농업사연구』, 11(1): 71-87.
- 김종덕(2002), 「농업의 세계화와 대안 농업 운동」, 『농촌사회』, 12(1): 133-159.
- _____ (2007a), 「지역식량체계 농업회생방안과 과제」, 『농촌사회』, 17(1): 5-32.
- _____ (2007b), 「지역식량체계에서 소비자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8(4): 617-627.
- _____ (2008), 「우리나라 로컬푸드 정책의 방향」, 『지역사회학』, 9(2): 85-113.
- _____ (2009), 「한국의 대안 농업과 농촌의 미래」, 『쌀·삶·문명연구』, 3: 161-179.
- 김철규(2008), 「현대 식품체계의 동학과 먹거리 주권」, 『ECO』 12(2): 7-32.
- _____ (2011), 「한국 로컬푸드 운동의 현황과 과제: 농민장터와 CSA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12(1): 111-133.
- 김철규·김선엽(2009), 「2008촛불집회와 먹거리 정치: 집회참여 10대를 중심으로」, 『농촌사회』 19(2): 37-61.
- 김흥주(2004), 「슬로우푸드 운동과 대안식품체제의 모색」, 『농촌사회』, 14(1): 85-118.
- 나영삼(2011), 「로컬푸드를 이용한 지역농업 활성화방안 연구: 완주군 사례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네모토 마사쓰구(2014),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를 통한 로컬푸드 운동의 활성화 방안: 한·일 비교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8(1): 57-73.
- 박민선(2008), 「세계농식품체계와 식품안전: 유전자조작 식품을 중심으로」, 『ECO』, 12(2) 63-87.
- 윤병선(2008a), 「로컬푸드 관점에서 본 농산가공산업의 활성화방안」, 『산업경제연구』, 21(2): 501-522.
- _____ (2008b), 「세계적 식량위기의 원인과 식량주권」, 『녹색평론』, 100: 77-89.
- _____ (2009), 「왜 지역먹거리운동인가?」, 『녹색평론』, 104: 36-49.
- 윤병선·김철규·송원규(2013), 「한국과 일본의 지역먹거리운동 비교: 생협, 농민시장, 꾸러미를 중심으로」, 『농촌사회』, 23(1): 49-86.
- 이해진(2012), 「소비자에서 먹거리 시민으로」, 『경제와사회』 96: 43-76.

- 이해진·이원식·김홍주(2012), 「로컬푸드와 지역운동 네트워크의 발전: 원주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학』, 13(2): 229-262.
- 이희상(2012), 「글로벌푸드/로컬푸드 담론을 통한 장소의 관계적 이해」,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0(1): 45-61.
- 정동일(2012), 「지역사회 개혁운동 혹은 소비자 운동?: 춘천지역 로컬푸드 운동의 프레임 변화와 그 현재」, 『지역사회학』, 13(2): 195-228.
- 정은미(2011), 「로컬푸드의 사례별 운영체계와 시사점」, 『농업전망 2011—농업·농촌과 농식품 산업: 새로운 시장과 기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p.195-216.
- 정태석(2006),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의 역사에서 유럽과 한국의 유사성과 차이: 유럽의 신사회운동과 한국의 시민운동을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72: 125-147.
- _____ (2009), 「광우병 반대 촛불집회에서 사회구조적 변화 읽기: 불안의 연대, 위험사회, 시장의 정치」, 『경제와사회』 81: 251-272.
- 허남혁(2009), 「생협 생산자 조직의 생산-소비관계 변화: 홍성 풀무생협 사례 연구」, 『농촌사회』, 19(1): 161-211.
- 홍경환·김지영·김양숙(2009), 「로컬푸드의 개념적 이해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22(3): 1629-1649.
- 홍성기·이재교·홍진표·최홍재(2009), 『광우병 촛불시위 추적보고서: 거짓과 광기의 100일』, 시대정신.
- Beardsworth, Alan and Teresa Keil(1997), *Sociology on the Menu: An Invitation to the Study of Food and Society*, London: Routledge, 박형신·정현주 역(2010), 『메뉴의 사회학: 음식과 먹기 연구로의 초대』, 도서출판 한울.
- Beck, Ulrich(1986), *Risikogesellschaft: Auf dem Weg in eine andere Moderne*, translated by Mark Ritter(1992), *Risk Society : Towards a New Modernity*, London: Sage Publications, 홍성태 역(2006), 『위험사회: 새로운 근대(성)를 향하여』, 새물결.
- _____ (2007), *World at Risk*, Polity Press, 박미애·이진우 역(2010), 『글로벌 위험사회』, 도서출판 길.
- Beck, Ulrich, Anthony Giddens and Scott Lash(1994), *Reflexive Modernization: Politics, Tradition and Aesthetics in the Modern Social Order*, Polity Press, 임현진·정일준 역(1998), 『성찰적 근대화』, 한울.
- Douglas, Mary and Aaron B. Wildavsky(1983), *Risk and Culture: An Essay on the Selection*

- of Technological and Environmental Danger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김귀곤 · 김명진 역(1993), 『환경위험과 문화』, 명보문화사.
- Douglas, Mary(1979), *Purity and Danger: An Analysis of Concepts of Pollution and Taboo*, London: Routledge, 유제분 · 이훈상 역(1997), 『순수와 위험: 오염과 금기 개념의 분석』, 현대미학사.
- Durkheim, Emile(1893), *De La Division du Travail Social*, 민문홍 역(2012), 『사회분업론』, 아카넷.
- _____ (1897), *Le Suicide: Etude de sociologie*, 황보중우 역(2008), 『에밀 뒤르켐의 자살론』, 청아출판사.
- Granovetter, Mark(1985), “Economic action and social structure: The problem of embeddedne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1(3): 481-510.
- Halweil, Brian(2004), *Eat Here: Reclaiming Homegrown Pleasures in a Global Supermarket*, W. W. Norton, 김종덕 · 허남혁 · 구준모 역(2006), 『로컬푸드: 먹거리-농업-환경, 공존의 미학』, 시울.
- Hinrichs, Clare(2000), “Embeddness and local food systems: notes on two types of direct agricultural market”, *Journal of Rural Studies*, 16: 295-303.
- Luhmann, Niklas(1988), “Familiarity, confidence, trust: problems and alternatives”, In Diego Grambetta, ed., *Trust: Making and Breaking Cooperative Relations*, Basil Blackwell, pp.94-107.
- Polanyi, Karl(1944), *The Great Transformati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Origins of Our Time*, Beacon Press, 홍기빈 역(2009), 『거대한 전환: 우리 시대의 정치 경제적 기원』, 도서출판 길.
- Salecl, Renata(2004), *On Anxiety*, Routledge, 박광호 역(2015), 『불안들』, 후마니타스.
- Sonntag, V.(2008). “Why Local Linkages Matter.” Sustainable Seattle.
(http://www.usask.ca/agriculture/plantsci/hort2020/local_linkages.pdf)
- Starr, Amory(2010), “Local Food: A Social Movement?”, *Cultural Studies <=> Critical Methodologies*, 10(6): 479-490.
- Urry, John(1995), *Consuming Places*, New York: Routledge.
- Weber, Max(1904),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 김덕영 역(2010),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도서출판 길.

Wrong, Dennis(1961), “The oversocialized conception of man in modern sociolog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6(2): 183-193.

<신문기사>

오철우(2013), “‘학술지 ‘몬산토GMO논문’ 철회 결정...저자들 반발”, 『사이언스 온』, 2013년 11월 29일자(<http://scienceon.hani.co.kr/138321>).

오철우(2014), “GMO논문 철회, 출판윤리 국제기준 벗어나”, 『사이언스 온』, 2014년 2월 11일자(<http://scienceon.hani.co.kr/149013>).

오철우(2014), “출판, 철회, 재출판... 돌아온 ‘GMO종양 쥐’ 논문”, 『사이언스 온』, 2014년 6월 26일자(<http://scienceon.hani.co.kr/172941>).

이태경(2015), “농산물 직거래 시장...2년간 26배 자랐다”, 『중앙일보』, 2015년 3월 26일자 (<http://news Joins.com/article/17439230>).

Building Solidarity for Local Food Movement

–Focused on Beck’s Risk Society Thesis and
the Solidarity of Anxiety–

Lee, Taehun · Park, Sung Hoon

Abstract

Local food movement, which aims to restore its social relationships and to form trust, needs to be distinguished from local food system and to maintain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with it. Local food movement as a social movement may need to mobilize the common spontaneous motivations without a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each participants from the first, but aims to build social solidarity and trust in the long run. This paper used Beck’s Risk Society Thesis and his concept of the solidarity of anxiety to examine the potential of the anxiety about global food risks to foster solidarity for local food movement. Psychological anxiety about global food risks would be justified by Ulrich Beck’s Risk Society thesis. Psychological anxiety about global food risks in the modern world extends to collective and public problem, because the risk causing the anxiety is structural although the anxiety is yet personal. Furthermore the anxiety about global food risks is possible to go head to head against the global food system so as to attain the social rationality.

Keywords : Local food movement, Global food risk, the solidarity of anxiety,
second modernity, Risk society